

www.kbfc.or.kr

Vol. 32

## inside BIFC

### 권두칼럼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주임교수 현석

###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Special Theme

부산,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 전문가 인터뷰

NAMU EnR 대표이사 김태선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KRX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inside FINANCE

### 국내 금융제도 현황

정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

### 특화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장내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동향과 전망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Global  
Carbon Market

글로벌  
탄소시장

Inside Busan Finance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저감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저감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현황과 부산에서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 inside BIFC

04

### **권두칼럼**

부산시 녹색디지털금융(Green Digital Finance)  
생태계 발전을 위한 소고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주임교수 현석

08

###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2

### **Special Theme**

부산,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14

### **전문가 인터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과 대응전략  
NAMU EnR 대표이사 김태선

18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20

###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KRX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inside FINANCE

22

### **국내 금융제도 현황**

정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

24

### **특화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장내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동향과 전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전 군

## inside APPENDIX

28

### **부록**

- 부산 일반 현황
- 부산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 BIFC 인센티브 제도
- BIFC 입주기관 현황



## 부산시 녹색디지털금융 (Green Digital Finance) 생태계 발전을 위한 소고

### 1. 서론

현대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과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반면, 그린 전환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녹색금융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디지털 기술은 녹색금융 등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DLT 등의 디지털기술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그린워싱Greenwashing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배경하에 부산시는 기존의 디지털 금융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녹색금융이 융합한 녹색디지털금융Green Digital Finance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부산시가 보유한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먼저 아시아의 금융센터로 발전하고, 최근 금융시장의 두 가지 흐름인 DX와 GX와 보조를 맞춰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디지털 금융과 녹색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부산시가 녹색디지털금융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디지털 금융DX과 녹색 금융GX의 현황과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디지털금융센터를 위한 노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녹색디지털금융센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up>1</sup> John Lee (2024), How DLT could help with green bonds, Accenture

## 2. 녹색디지털금융(Green Digital Finance)

핀테크는 이미 금융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Jeucken, 2010; Chishti & Barberis, 2016<sup>2,3</sup>. G20 지속가능금융 연구그룹 SFSG, 2018은 디지털 기술을 지속가능금융에 적용하는 새로운 관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디지털금융연합SDFA은 금융부문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과제를 확인했으며, 더 나은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해 금융부문의 정보와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 선택권을 넓히며 추가적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의 포용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장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기술은 금융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시스템은 중개자 없이 금융 거래를 처리하며 거래 과정을 간소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증진시키며,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줄인다. 이는 특히 국경 간 결제와 같은 높은 빈도의 거래에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sup>5</sup>

디지털 금융은 금융 서비스와 상품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금융 서비스의 투명성, 보안성, 그리고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한번 기록되면 변경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한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거래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줄이고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 시킨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된 계약 이행이 가능해져 계약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녹색채권은 기후 변화 완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이다. 이는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녹색채권의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탄소 배출권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 기반의 메커니ズム으로, 기업들이 허용된 배출량 내에서 운영하도록 유도하며,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은 초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녹색채권시장과 탄소 배출권시장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녹색채권의 자금용도나 탄소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 이 두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은 녹색채권과 탄소 배출권 등 녹색디지털금융에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 기록을 변경 불가능하게 보존하므로 투명성을 제공한다. 이는 사기를 감소시키고,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 녹색채권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여,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린워싱Greenwashing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녹색채권과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촉진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은 초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DLT는 규제 준수를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에 맞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보장하며 이는 금융 기관이 규제 사항을 보다 쉽게 충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sup>6</sup>

<sup>6</sup> Chugh, Pulak. (2023). Leveraging Blockchain Technology in Adopting Digital Tokenization of Green Bonds. 10.1108/978-1-83753-060-120231015.

# Green Digital Finance



<sup>2</sup> Chishti, Susanne, and Janos Barberis. 2016. *The Fintech Book: The Financial Technology Handbook for Investors, Entrepreneurs and Visionar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sup>3</sup> Jeucken, Marcel. 2010. *Sustainable Finance and Banking: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London: Earthscan.

<sup>4</sup> Sustainable Digital Finance Alliance (SDFA). 2018. *Digital Technologies for Mobilizing Sustainable Finance: Ap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ies to Sustainable Finance*. Geneva: Sustainable Digital Finance Alliance.

<sup>5</sup> Axelsen, Henrik and Rasmussen, Ulrik and Jensen, Johannes Rude and Ross, Omri and Henglein, Fritz, Trading Green Bonds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pril 17, 202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420803> or <http://dx.doi.org/10.2139/ssrn.4420803>

결론적으로, 블록체인과 DLT의 활용은 녹색채권과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녹색디지털금융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녹색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융합은 금융 기술핀테크<sup>7</sup>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너지는 디지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촉진함으로써 친환경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녹색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융합은 자본시장 활동을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와 연계하여 금융 시스템을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장기적인 환경 및 사회적 우선순위에 부합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디지털금융센터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블록체인 산업 및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 비전을 포함하고 있고, 부산시는 강력한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sup>7</sup>

<sup>7</sup> 부산시(2023),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방안 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nbtnewsBU/1580432>

이러한 배경 하에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센터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이 모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sup>8</sup>

또한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금융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금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셋째,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이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고, 다양한 육성 방안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산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하고 있다.

### 4. 녹색디지털금융센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녹색금융을 결합한 녹색디지털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해볼만 하다.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의 도입을 통해 부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친환경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노력에 기여하여 부산을 녹색디지털금융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최근 아시아 내 디지털채권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기획재정부는 아세안+3 채권시장 통합 및 표준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ABMI의 중기 로드맵(2023~2026)에 따라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sup>DBMF</sup>이 설립되었다. 이 포럼은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sup>DLT</sup>, 빅데이터

<sup>8</sup> 금융위원회(2023),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0084?srchOrg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sup>9</sup> 부산국제금융진흥원(2024), 부산 디지털 금융 육성 방안 연구용역

<sup>10</sup> 홍콩통화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연구에 따르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기반에 발행된 디지털채권의 70%가 아시아의 기관이 발행한 것이다. HKMA (2023), AN ASSESSMENT ON THE BENEFITS OF BOND TOKENISATION.

## Green Digital Finance





분석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장 효율성과 통합을 개선하고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정책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Tridecagon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3 지역 내 국경 간 증권결제를 위해 DLT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역내 회원국의 채권시장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DBMF와 Tridecagon 프로젝트는 아세안+3 지역의 DLT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아시아에서 디지털 채권과 탄소배출권 토큰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1</sup>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부산시가 그린디지털금융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부산시는 금융 관행을 국제표준에 맞춰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ISO 14064와 같은 국제 표준과 연계하여 녹색 금융에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모범 사례의 채택을 촉진하며 규제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탄소 배출권 거래 협회<sup>12</sup>와 같은 글로벌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복잡한 디지털 녹색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강력한 금융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고 디지털 녹색금융 생태계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 및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업해야 한다. 녹색채권과 탄소 배출권을 위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시 공무원, 금융기관, 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녹색채권, 탄소 배출권,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녹색금융 프로젝트에 세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제공하여 이러한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 검증 및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쿄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증권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토큰화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허브로서 도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sup>13</sup>

마지막으로, 디지털금융의 국경 간 활용의 이점을 살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녹색금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 아시아의 금융센터와의 파트너십 및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지식, 기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11 ADB (2023), Connecting Market Infrastructures in ASEAN+3: The Project Tridecagon Proof of Concept. <https://www.adb.org/publications/market-infrastructures-asean3-project-tridecagon>

12 구체적으로 도쿄도는 증권토큰(security token) 발행과 관련된 비용의 상당 부분(최대 3분의 2)을 부담하여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 부산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이행계획을 담은 제1차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 2023년 5월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및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 수립을 하였음
- | 부산에 특화된 탄소중립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SG NET-ZERO**



## 계획개요

- 목적 : 기후위기 영향 예방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 근거 : 탄소중립 기본법 제11조 및 부산시 기본조례 제7조
- 계획기간 : 10년(2024~2033), 5년마다 수립 \* 기준년도 : 2018년
- 수립기간 : '23.4월 ~ '24.4월 \* 국가기본계획 '23.4월 수립

## 주요내용

- 비전 →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비전과 부산시 도시 비전 반영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년까지 45% 감축 \* 국가 목표 : 40% 감축

(2018년) 16,628천톤 ⇌ (2030년) 9,146천톤

- 부산 대표 4대 정책 →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 및 목표 달성을 가속화



- 부문별·연도별 감축정책 : 8개부문 101개 과제

부분별 감축정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제로에너지 건물	친환경차 보급	스마트 생산기반 마련	폐기물 원천감량
수소	수소인프라 구축	흡수원	CCUS	국제감축
	생활권 도시숲	기술개발 및 실증강화	기술지원	

- 기후위기 대응 이행기반 강화정책 : 8개부문

이행기반 강화정책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국내·외 협력	교육·소통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공유재산 대응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	교육 및 실천강화
녹색성장	청정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인력양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회적 기반 구축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 비전 및 체계도

비 전

4대 전략

중장기 감축목표

부산 특화  
탄소중립  
정책부분별  
감축정책이행기반  
강화정책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전략적이고 과감한 저감으로

주도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및 자원순환 중점

미래산업에 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실천형 탄소중립

세계중심의 해양 + 그린 특별시

도약을 통한 지역특화형 탄소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 달성**

(2018년) 16,628천톤 → (2030) 9,146천톤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 및 목표 달성 가속화**15분 공간  
탄소중립 도시글로벌 수소경제  
그린도시자원 재활용  
메카도시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해양도시

<b>건물</b> · 제로에너지 건물 · 그린리모델링 · 15분도시 조성	<b>수송</b> · 친환경차 보급 · 대중교통 활성화 · 저탄소 교통수단	<b>농축수산</b> · 스마트 생산기반 마련 · 도시농업 · 저탄소 어업	<b>폐기물</b> · 폐기물 원천 감량 · 재활용 확대 · 재자원화 에너지화
<b>수소</b> · 수소인프라 구축 · 수소활용 확대 · 기술개발기반 강화	<b>흡수원</b> · 생활권 도시숲 · 산림자원 보전 · 블루카본 확대	<b>CCUS</b> · 기술개발 및 실증강화	<b>국제감축</b> · 기술지원과 인프라 구축

<b>기후위기 적응</b>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이행 평가	<b>공유재산</b> 공유재산 보호 단계별 대응	<b>국내·외 협력</b>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 그린 ODA 확대	<b>교육·소통</b> 탄소중립 실천교육 홍보 및 실천 강화
<b>녹색성장</b> 녹색기술 혁신 녹색산업 육성	<b>청정에너지 전환</b>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b>정의로운 전환</b> 사회적 기반 구축 지역기반 선제적 전환지원	<b>인력양성</b> 대학 등 협력모델 구축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 이행점검·평가체계 운영



## 부산 대표 탄소중립 정책

- 부산만의 특화된 대표 정책 중점 이행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허브도시로 성장
-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녹색기술·산업이 접목된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목표 달성을 가속화
  - 부산의 강점(해양분야 산업·기술, 대학 인재육성, 폐기물 집적단지 등)을 활용하여 저탄소 생태계를 선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

### ① 15분 공간 탄소중립 도시

- '21년 부산혁신 1호 공약으로 15분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창출
- 보행중심(도보, 자전거 등)의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를 저감하고,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과 자원 재활용 기반 구축으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② 글로벌 수소경제 그린도시

- 해양분야에 특화된 미래 수소경제 성장 전략으로 수소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 ·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
- 혁신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융합 전략으로 수소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

### ③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도시내 폐기물 집적화 및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으로 재활용 산업(재제조업) 선정

### ④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해양도시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글로벌 해양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 및 적응대책 선제적 이행
- 탄소중립형 항만 인프라 및 연관 산업 육성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해상도시 건설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부산,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금융이  
기존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도록 할 예정



지난 2024년 6월 20일 부산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특히 부산시는 제조업을 신청한 타 지자체와 달리 유일하게 서비스 분야로 특구 지정을 받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구 지역은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3단계( $10,293m^2$ )와 일반용지( $16,973m^2$ ), 북항재개발 지역 2단계( $723,710m^2$ )로, 총  $750,976m^2$  규모이다. 이에 BDX·BNK자산운용·코스콤 등 29개 금융기업이 부산시 금융산업 발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조 4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 일반용지

2025년 12월 완공되는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3단계는 디지털금융으로 특화한다. 펀테크·블록체인·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 기업과 투자·보증·금융교육 등 원스톱 기업지원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용지는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예정 부지로, 한국산업은행법이 통과되면 금융기회발전특구 전반에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는 ▲디지털금융 ▲글로벌금융 ▲해양파생금융 ▲금융R&D ▲정책금융 등 5대 클러스터화로 조성한다. 디지털금융에는 세종텔레콤과 더존비즈온이 투자 등에 참여하며, 해양파생금융에는 금융 정보기술 IT 기업인 코스콤이 파생공동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 금융기회발전특구의 차별화된 혜택

부산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최대 3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주택특별공급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및 다양한 재정지원도 마련 중이다.

## 기대효과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1조 4억 원의 투자와 ▲1,129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25,000명의 고용, 5조 8천억 원의 생산,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3단계가 2025년 완공되어 역외 기업을 포함한 180개 기업에 4천여 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돼,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금융이 기존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과 대응전략

### 1. 들어가는 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체결된 파리협약 제6조는 시장메커니즘(제6.2조, 제6.4조)과 비시장메커니즘(제6.8조)에 기반한 국가간 협력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 VCM과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2년 10월 열린 제41차 ICAO 총회에서 2050년까지 21.2Gt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방안 중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통한 잠재적 자발적 탄소크레딧 수요량은 약 4.0Gt(19.1%)에 달한다.

최근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RE100 캠페인, ESG 공시 의무화, Scope3 배출량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을 중심으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중심에는 탄소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탄소시장은 크게 정부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 CCM, 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발적 탄소시장 VCM, 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나눈다. 규제적 탄소시장의 경우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나 2050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들어 2030 NDC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다양한 GHG 감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가 2021년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500억 달러(65조 원)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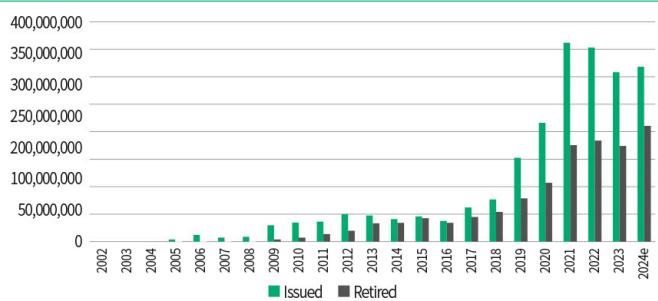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공식화한 가운데 2023년 3월에는 2018년 배출량인 727.6백만 톤 대비 291.0백만 톤 감축하는 목표(40.0% 감축)를 수립했다. 감축목표 중 자발적 탄소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흡수 및 제거 부문(흡수원, CCUS, 국제감축)의 감축량은 75.4백만 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 중 25.9%를 차지하고 있어 자발적 탄소시장 [VCM](#)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2. 자발적 탄소시장 수급현황

2024년 4월 1일 현재(누적기준), 글로벌 자발적 탄소크레딧 발행은 1,927백만 톤이 발행되었으며 소각은 1,039백만 톤의 실적을 보였다. 미소각량 [발행-소각](#)은 888백만 톤으로 공급우위인 잉여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3년도 발행은 353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세를 보였고 소각의 경우는 183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2024년도 발행과 소각은 각각 206백만 톤과 165백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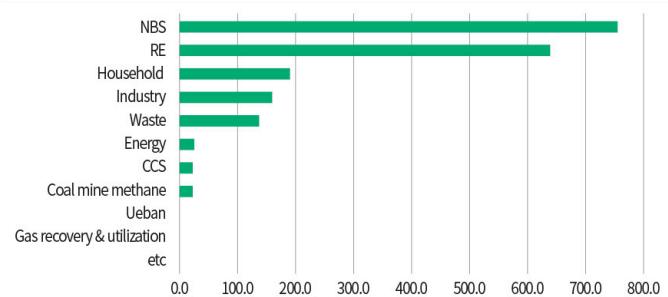
**자료1** 자발적 탄소크레딧 연도별 발행(공급) 및 소각(수요)



※ 출처 : NAMU EnR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 Climate Focus

잉여인 미소각 크레딧은 2017년 19백만 톤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에는 187백만 톤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미소각량의 증가는 주요 언론매체에서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한 그린워싱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본격화되었다. 자연기반 프로젝트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자료2** 프로젝트별 자발적 탄소크레딧 누적발급량



※ 출처 : NAMU EnR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 World Bank

프로젝트별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누적발급량을 살펴보면, ’24년 4월 현재, 총 누적 발행규모는 1,955.4백만 톤으로 이중 자연기반 탄소크레딧의 경우 756.1백만 톤(38.7%)이 발행되었고 재생에너지 탄소크레딧은 639.6백만 톤(32.7%) 발급되었다.

한편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은 환경부에서 외부사업감축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방법론 등록 건수는 293개, 인증량은 51.3백만 톤의 인증실적을 보였다.

## 3. 자발적 탄소시장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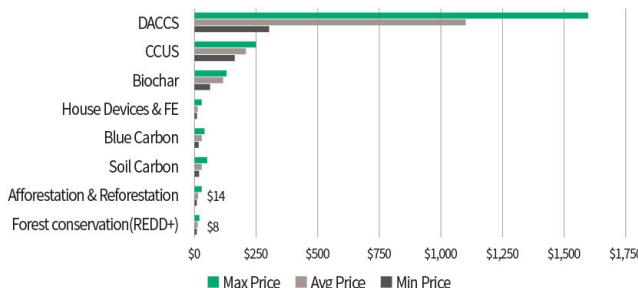
자발적 탄소시장은 자연기반 탄소크레딧 시장과 기술기반 탄소크레딧 시장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파리협약이 공식화된 2021년부터 자연기반 솔루션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초 자발적 탄소시장 [VCM](#)에 대한 그린워싱 [Greenwashing](#) 여파로 탄소크레딧 수요는 급감했고 그 결과 자발적 탄소크레딧 가격은 급락했다. 특히 조림 및 재조림 부문의 자연기반 탄소크레딧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영국 가디언지의 “자연기반 탄소크레딧에 대한 감축효과가 미미하다”는 그린워싱 기사 보도 이후 줄곧 약세행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운영하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적격 탄소크레딧 인증기관 축소(’23년 11곳에서 ’24년 2곳만 지정) 발표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

**자료 3 규제적 탄소시장(CCM) 가격 vs 자발적 탄소시장(VCM) 가격**

※ 출처 : NAMU EnR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 S&P Global

'22.01.18일~'24.04.09일 기간 동안, 글로벌 규제적 탄소시장<sup>CCM</sup> 가격은 14.8% 하락했으나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sup>VCM</sup> 가격은 96.1% 하락했다. 자연기반 솔루션은 REDD+<sup>조림 및 재조림</sup>이 중심이 되고 있고 기술기반 솔루션은 탄소포집<sup>CCUS 및 DAC</sup>이 주력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감축 프로젝트들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계감축비용<sup>MAC, Marginal Abatement Cost</sup>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자료 4 프로젝트별 자발적 탄소크레딧 가격**

※ 출처 : NAMU EnR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 Abatable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성격인 KOC 가격은 규제적 탄소시장<sup>K-ETS</sup> 상황에 따라 일정 물량이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외부사업감 축실적<sup>KOC</sup> 중 인증량의 5.0% 내에서 상쇄배출권<sup>KCU, Korean Credit Unit</sup>으로 전환 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들 배출권 가격은 할당배출권<sup>KAU, Korean Allowanced Unit</sup>과 동조화되는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방안**

규제적 탄소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 기관, 비영리조직<sup>NGO</sup> 등이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확보한 탄소크레딧<sup>Carbon Credit</sup>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크레딧은 생성-유통-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축 프로젝트 개발자, 표준인증 및 등록기관, 크레딧 평가기



관,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기반 토큰화, 탄소크레딧 최종 수요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종 수요자들은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MAGA<sup>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sup> 등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sup>ESG, RE100</sup>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자료 5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조**

※ 출처 : Alex Prather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sup>VCM</sup> 개설을 위한 5대 기본방향(안)은 △2030 국가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중심 및 시장 자율 기능 존중 △경제주체<sup>정부, 기업, 민간</sup> 적극 동참 유도 △낮은 수준의 정책적·제도적 Rule Setting 필요 △글로벌 환경규제가 신보호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원칙(안)은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 유동성, 편리성, 다양성, 이중계산 방지,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DGs 및 핵심 탄소원칙CCPs 준수 △블록체인 기술기반 탄소  
크레딧 토큰화 △시장참여자 간 Fire Wall 마련 △탄소크레딧 평가  
및 등급 랭킹Rating 등의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 5. 맷음말

세계 최초의 자발적 탄소상쇄 프로젝트는 1989년 미국 전력회사 AES CORP가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5,000만 그루의 소나무와 유칼립투스를 심은 과테말라 산림 사업이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가 시작된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26년의 간극이 있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조 및 생태계 파악이 요구된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미국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발급은 415백만 톤으로 전체 발급량의 33.7%를 차지하고 있고 프로젝트 진행 건수 기준으로는 인도 다음으로 1,362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파리협정 출범을 기점으로 자연기반 솔루션조립 및 재조립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UN-CDM 프로젝트 건수를 뛰어넘는 8,000여개의 GHG 감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됨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제한이 없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가능한 유연성을 지닌 반면, 부작용으로 탄소크레딧에 대한 신뢰성, 유동성, 투명성, 이중계상의 문제점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인 이니셔티브와 탄소크레딧

66

글로벌 탄소시장은 파생상품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만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생태계가 부산을 중심으로 조성될 경우 규제적 탄소시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9

평가Rating 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2030 국가 NDC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더 나아가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ESG, RE100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2014년 1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부산소재 한국거래소KRX로 확정되었다. 선정 배경은 경합을 벌였던 전력거래소KPX에 비해 주식과 파생상품 등 거래 노하우와 시장운영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글로벌 탄소시장은 파생상품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만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생태계가 부산을 중심으로 조성될 경우 규제적 탄소시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문헌

- 탄소시장의 비밀, 김태선, 경문사, 2009.10
- 에너지 · 탄소배출권 시장개론, 김태선 외 2인, 경문사, 2013.05
- 탄소시장 인베스트, 김태선, 두드림미디어, 2023.06
-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 김태선 외 7인, 두드림미디어, 2024.03
- 자발적 탄소시장 디아제스트, 김태선, 두드림미디어, 2024.05
- 2023 한중일 탄소가격 포럼, 김태선, 환경부, 2023.11
- CCM 시장 이해와 CCM 시장구조 분석 II, 김태선, 중소벤처기업부, 2023.09
-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방안, 김태선, 서울파이낸스, 2023.10
-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현황 및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방향, 김태선, VCMC, 2024.03
- 자발적 탄소시장 구조 및 탄소크레딧 레이팅 필요성, 김태선, 서울파이낸스, 2024.04
- 국내 탄소시장 현황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김태선, 디지털조선TV, 2024.05
- 국내외 배출권시장 현황 및 가격 동향, 김태선,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협의회, 2024.05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3, World Bank Group, 2023.05
-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23, Ecosystem Marketplaces, 2023.11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방향 토론회 발표



일시/장소	2024. 2. 6.(화) 15:00 /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발표자	이명호 원장(부산국제금융진흥원)
발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향, 하윤수(부산연구원 해양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li> <li>· 부산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제언, 이명호(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li> <li>·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조건과 혁신 전략, 우종균(동명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li> </ul>
주최/후원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연구원 / BNK부산은행

## Z/Yen사와의 공동연구 웨비나(Developments in Maritime finance & Maritime Financial Centres) 개최



일시	2024. 2. 14.(수) 17:00(KST)
웨비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 1) Presentation about the report findings 연구 결과에 대한 브리핑과 시사점</li> <li>· (Session 2) The Representative Speaker's Review &amp; Future Course for BFC 연구 보고서 리뷰와 Busan finance center의 미래</li> </ul>
주요 참석자	Z/Yen CEO Mike Wardle, Simon Mills, 윤희성 교수(국립한국해양대학교)

##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일시/장소	2024. 3. 19.(화) 11:00~15:00 /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
주제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의 성과와 과제
공동주최/주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제신문 / (사)금융도시부산포럼
주요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사)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li> <li>· (축 사) 김광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li> <li>· (기조연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금융특구 시장(영상)</li> </ul>

## 탄소배출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일시	2024. 4. 11.(목) 14:00
주요내용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및 부산의 가능성
발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규제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li> <li>· 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li> <li>· 부산의 탄소금융활성화 방향</li> </ul>
참석자	조금택 지구인* 대표 (* 탄소금융 스타트업)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 「제9회 부산국제금융중심지포럼」개최



일시/장소	2024. 4. 17.(수) 14:00~17:00 /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 (BIFC 39층)
주관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 참석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사원기관(부산광역시·한국거래소·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BNK부산은행·기술보증기금) 실무 전문가, 학계 및 업계 인사 23명
주제 발표	1) 해양금융의 현황과 과제 2) 선진 디지털 자본시장의 혁신 3) 디지털금융의 바람직한 규제방안

## 국제금융센터세계연합(WAIFC) 사무총장 Dr.Biedermann, Web3.0포럼 기조발표



일시/장소	2024. 5. 29.(수) 10:00~17:00 /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
주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의 시대,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주최/주관	Web 3.0 포럼 / 전자신문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강대학교
주요참석자	· (국내) 김대식 웹3.0포럼 의장, 김광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 · (해외) Jochen Biedermann WAIFC Managing Director, Patrick Storey VISA Korea&Mongolia Country Manager

## HMM 본사 부산 이전 대토론회 토론패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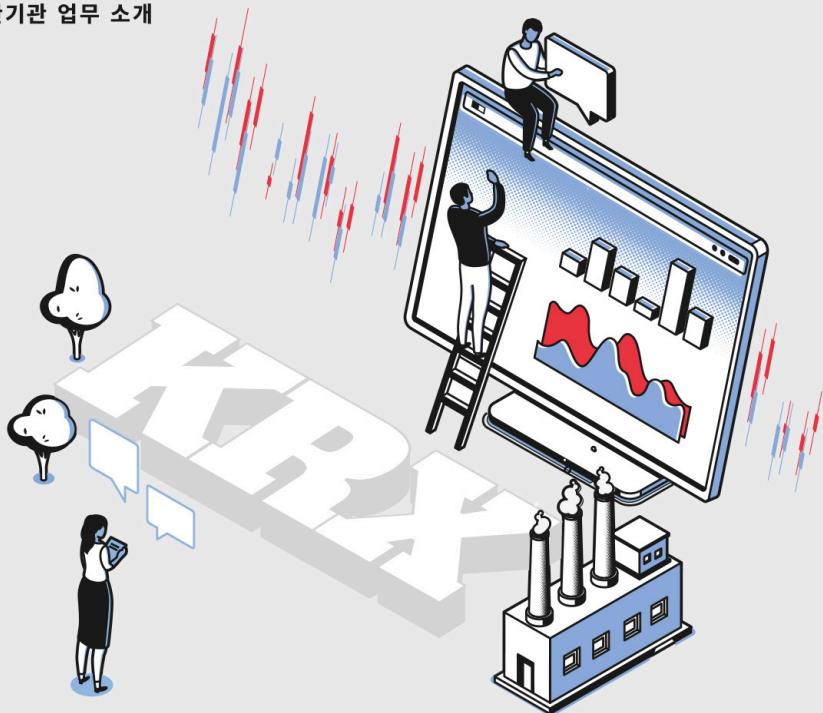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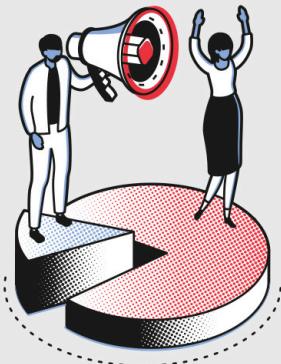
일시/장소	2024. 5. 30.(목) 10:00 / 벡스코 제2전시장
주최/후원	(사)한국해양정책연합, 부산상공회의소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제신문, KNN
프로그램	· (개회식) 도덕희 대표(한국해양정책연합), 정현민 상근부회장(부산상공회의소) · (발제) 장하용 연구위원(부산연구원) · (토론) 좌장: 배정철 원장(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요 참석자	박미애 실장(부산국제금융진흥원), 강윤호 교수(국립한국해양대학교), 윤희성 교수(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이규중 사무처장(부산상공회의소), 황진희 부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부산국제금융포럼 개최



일시/장소	2024. 6. 25.(목) 14:00 / 벡스코 제2전시장
주최	부산일보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프로그램	· (개회식)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이사, Philio Tam CEO GREEN-X · (발제) 1.블록체인특구, 부산의 디지털금융 미래(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이사), 2.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의 과제(박미애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실장), 3.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정책방안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RX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1. 배출권시장 도입 배경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가중했으며,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와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UN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irc}\text{C}$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선언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시장기반 접근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2014년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규정 마련 등을 통해 2015년 1월 12일 배출권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 (1) 배출권 개념

배출권은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입니다. 여기서 온실가스란 대기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들의 온난화 효과와 범위는 제각각입니다.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여러 개의 다른 통화를 하나의 통화로 환산하듯이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합니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단위로 거래하며, 1배출권은 1이산화탄소상당량 톤에 해당합니다.

## (2) 배출권 라이프사이클

배출권 거래제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획기간을 설정 하며 5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계획 기간별 배출권 발행 총량(Cap)을 산정하고 세부 이행 연도별로 감축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업체별로 할당합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서는 연 단위별 배출권 종목을 계획기간 초에 상장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연말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음

해 8월까지 정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시장에 상장된 각 연도별 배출권 종목은 다음해 8월 말에 상장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각 연도별 할당배출권은 시장에 상장된 기간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제3차 계획기간('21년~'25년) 중에 있으며 해당 계획기간이 시작되었던 2021년에 '21년부터 '25년 할당배출권 종목들이 상장되었으며, 현재 배출권시장에서는 할당대상업체들이 올해 8월 말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인 '23년 할당배출권이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2.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 (1) 시장 참여자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의 자격은 할당대상업체와 공적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회원, 외부사업감축량KOC 전문회원,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GIR에서 관리하는 배출권등록부에 거래계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 (2) 거래 대상

배출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종목은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상쇄배출권KCU: Korea Credit Unit 및 외부사업 감축량KOC: Korea Offset Credit으로 구분합니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업체별로 할당한 배출권이며, 상쇄배출권은 국가가 할당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전환한 배출권입니다. 할당대상업체에 한하여 자신이 보유한 외부사업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할당배출권의 5%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거래 방식

배출권시장의 거래 방식은 주식시장과 유사합니다. 주식 시장처럼 복수의 매도자·매수자 간의 거래인 경쟁매매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에 의한 거래인 협의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시장에는 경매가 존재하며 이는 정부에서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물량에 대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 유상할당업체로 회원가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시장 매매방식별 거래제도

구 분	경쟁매매	협의매매	경 매
거래시간	10:00*~12:00 (호가접수 09:00~12:00)	10:00~11:30	13:00~14:00
호가수량 단위	1배출권 (1톤)	100배출권 (100톤)	
1회 호가한도	100,000톤	1,000톤~ 3,000,000톤	입찰수량의 15%~30%
호가가격 단위		~1천원: 1원/1천원~5천원/5원/5천원~1만 원: 10원 1만 원~5만 원: 50원/5만 원~10만 원: 100원/ 10만 원~: 500원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10% *최초거래일 시기는 ±20%	기준가격 ±30%	-
호가의 종류	지정가만 가능	-	-

### (4) 배출권 거래 규모 및 가격

배출권시장 개설 이후 전체 할당배출권 거래량 중 장내 거래 비중은 약 60% 수준이며, 배출권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가격의 역대 최고가는 40,900원, 최저가는 7,020원으로 최근 8,000원대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

- 2024년 4월 30일 정부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
- 향후 우리나라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 필요
- 공시 기준 초안은 4개월간('24.5.1~'24.8.31)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향후 적용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가 구체화되어 발표될 예정

## 1. 지속가능성 공시 개념 및 도입 배경

2024년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up>KSSB</sup>는 우리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우리기업에 적용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성 공시(혹은 'ESG 공시') 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공시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sup>Sustainable Growth</s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주요국들이 ESG 공시 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보다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본시장 참여자(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2.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

해외 주요국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전담기구를 발족하고 공시기준 제정 및 공시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EU의 경우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sup>EFRAG</sup> 주도로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sup>ESRS</sup>을 제정·채택('23.1월)하였으며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up>SEC</sup>에서 공시규칙을 제정('24.3월)하여 '26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그 외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에서도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 제정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관할권별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요약 표

국가 및 관할당국	기준개발			공시 채널	적용대상	보고시기	인증	
	제정기구	개발현황	향후일정					
EU	EC	EFRAG	ESRS 1st 세트 채택 ('23.7.31일)	SME 기준·산업별 기준·비EU 기준 ('24, '26년)	EU 대기업·상장 SME·비EU 기업	'25년 (FY24)	제한적 인증부터	
일본	FSA	SSBJ	ED 의견수렴 ('24.7월)	기준 발표 ('25.3월)	모든 프라임 상장기업	'27년 (FY26)	인증	
미국	SEC	SEC	최종안 승인 ('24.3.6일)	연방관보 계재 60일 후 발효	법정 공시	모든 공개기업	'26년 (FY25)	제한적 인증부터
캐나다	CSA	CSSB	ED 의견수렴 ('24.6월)	기준 발표 ('24.4Q)		증권 발행자	'26년 (FY25)	-
호주	재무부	AASB	ED 의견수렴 종료	기준 발표 ('24.6월)	법정 공시	기업법 2M 연차보고서 제출 기업	'26년 (FY25)	제한적 인증부터
영국	DBT	DBT	ISSB 기준 도입 의견 수렴 종료	기준 발표 ('24.7월)			'26년 (FY25)	-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회	본토 거래소	ED 의견수렴 종료	기준 발표(미정)	거래소 공시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	'26년 (FY25)	선택
싱가포르	회계기업 관리청	SGX	ED 의견수렴 종료	기준 발표(미정)		상장기업·대비상장사	'26년 (FY25)	제한적 인증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24.12),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에서 발췌

### 3.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경과

글로벌 ESG공시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22.12월)하였으며 이어서 국내 ESG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ESG 금융추진단\*」을 조직('23.2월) 하였다.

\* ESG공시를 포함한 ESG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학계·민간전문가로 구성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해외 주요국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공시 기준 제정 동향을 분석·파악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단체, 투자자, 민간전문가 대상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ISSB\*기준을 기준점으로 하여 EU·미국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시장 상황과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상황 등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 '23.6월 일반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S2(기후)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세계 여러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수립의 기준점으로 활용됨.

### 4.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초안)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공시 기준은 크게 ①기후 관련 공시사항(의무)\*과 ②정책목적 관련 공시사항(선택)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후 관련 공시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 E(환경), S(사회), G(자본구조) 중 E(환경)에 해당하는 기후 관련 공시만 우선 의무화 되었으며 향후 S(사회), G(자본구조)에 관한 공시 기준이 별도로 제정될 예정

####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 (IFRS S2 기반)
추가공시 (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 ① 기후 관련 공시사항(의무)

보고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4가지 핵심요소(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지배구조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세스, 이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등을 공시

(2) 전략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해당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기회·위험 요인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회복력 등에 대해 공시

(3) 위험관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process을 구체적으로 공시

(4) 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 구체적으로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 기후 관련 목표 및 기타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

한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정책목적 관련 공시사항(선택)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선택공시) 사항으로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와 정부부처 등의 정책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들을 ESG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예. (1)국내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 :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 등(온실가스배출, 배출권 관련 등)

(2)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 가족친화경영 확산, 기업의 안전경영인권경영 확산 등을 위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보 등(출산휴가 사용 직원수, 장애인고용률 등)

### 5.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금번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은 4개월('24.5.1~'24.8.31)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공시 의무적용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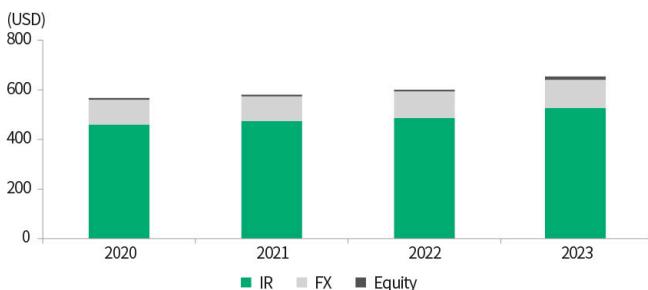
\* 금융위원회는 공시 의무 적용대상을 상정기업에 대해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예: 자산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총 코스피 상장사)으로 도입시기는 '26년 이후가 될 것임을 밝힌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이 우리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장내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동향과 전망

그림 1 글로벌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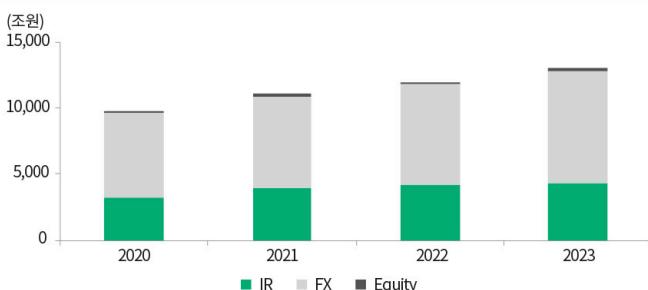


자료: BIS

국내 역시 2023년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IS)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는 5경 8,317조 원으로 2022년의 5경 2,152조 원에 비해 11.8% 증가하였다. 거래잔액 기준으로도 2023년 말 기준 사상 최대인 12경 9,633조 원을 기록하였다(2022년 대비 9% 성장).

글로벌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자율보다 외환관련 거래규모가 압도적이다. 외환관련 파생금융상품 중에서는 외환선도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무역결제와 자산운용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2023년에 외환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는 4경 2,024조 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2023년 이자율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1경 5,793조 원이었다. 반면 거래잔액 기준으로는 이자율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이 외환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보다 2배에 달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자율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잔액은 8경 5,642조 원인 반면 외환관련 거래잔액은 4경 3,415조 원이다.

그림 2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서비스

세계거래소연맹(WFE)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옵션 1,040억 계약과 선물 303억 계약을 기록하여 2022년 대비 59%나 급증하였다. 특히 옵션 거래규모가 급증하였으며(2022년 대비 89% 증가), 인도 지수옵션시장의 폭발적인 양적 팽창과 미국의 초단기 옵션Zero day to Expire, ODTE의 급성장에서 비롯되었다. 지수옵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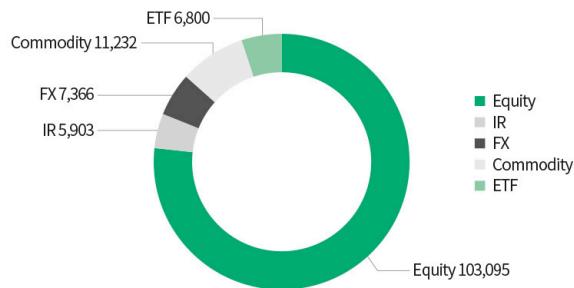
## 2023년 국내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동향

2023년은 글로벌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잔액Notional amounts outstanding은 667조달러를 기록하였다. 연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이며 2022년 말 대비 7.9% 증가하였다. 참고로 World Bank가 집계한 전 세계 GDP(2022년 기준) 100조달러의 6.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BIS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분야는 이자율 장외 파생금융상품으로, 거래잔액은 530조 달러(전체의 79%)에 달하며 2022년 대비 8.0% 늘어났다. 외환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잔액은 118조 달리이며, 주식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잔액은 7조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의 해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였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긴축정책과 소위 미국 예외주의에 힘입어 강달러 현상이 확산되면서 외환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외환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은 2022년 말 대비 2023년 말 9.7% 증가하였다. 주식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도 2022년 말 대비 2023년 말 12.5% 증가하였으며, 특히 옵션상품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에서 인도의 거래비중은 무려 60%(거래량 기준)에 달한다. 기초 자산별로는 주식과 이자율, 원자재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double digit 증가세를 보였으며 외환 파생상품만 single digit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2023년 글로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11조 달러이며 주식현물 거래대금은 129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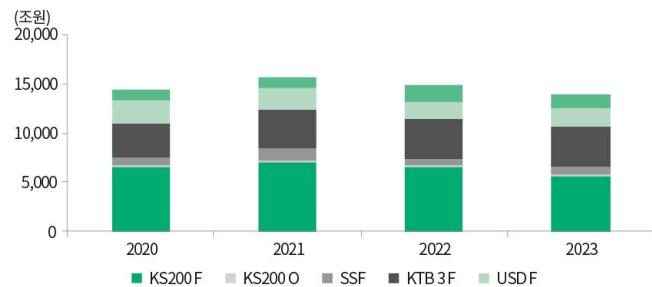
**그림 3** 글로벌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



참고: 백만계약 자료: WFE

한국거래소 KRX에 따르면,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는 글로벌 시장상황과 달리 역성장을 보였다. 2023년 KRX의 전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1경 4,36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5% 감소 하였으며, 2021년에 비해서는 14%나 축소된 거래를 기록하였다. KOSPI200 선물의 거래위축이 결정적이었다(2023년 연간 거래대금 5경 6,091조 원 vs 2022년 6경 5,685조 원). 반면 미국달러선물은 2021년 대비 24%나 증가하였다. '강달러' 현상의 지속으로 환해지 수요가 급증한 덕이다. 채권 선물은 채권시장의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장기물(10년국채) 중심으로 위축되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와 구조화상품 ELS의 손실우려, 상대적으로 동력이 정체된 현물시장 등의 연유로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그림 4** KRX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 추이



자료: KRX

## 2023년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특징

2024년 2월에 진행된 유럽최대 파생상품거래소 EUREX의 “2024 Derivatives Forum”에서는 2023년 글로벌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핵심 변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의제로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관리”, “유동성과 담보관리”, “기술혁신과 디지털 자산”, “지속가능성과 탄소” 등이다. 해당 포럼에서는 복잡하고 경쟁적인 금융환경에서 Multi-asset trading 차원의 파생상품 거래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특히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유동성과 담보관리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AI 도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과 분산원장을 통한 투명성 확보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선물과 스왑 등 환경관련 파생금융상품시장은 향후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신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EUREX의 “2024 Derivative Forum”에서는 금리 상승국면에서 투자위험과 유동성(및 담보)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기술을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글로벌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2020년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투자자 Retail’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이다. 미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선물산업연합 FIA의 2024년 연례총회(BOCA, 2024년 2월 개최)에서는 수많은 파생상품 거래소 책임자들과 파생상품 중개투자사, 헤지펀드가 모여 개인투자자들의 장내파생상품 시장 참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낮아진 시장진입 장벽과 급증한 레버리지 투자수요, 암호화폐시장의 경험과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젊은 투자자의 확대 등 개인투자자의 파생금융상품시장 진입의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 업계는 투자자 교육과 중개기관의 유동성 관리, 투자자 친화적인 상품개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파생금융상품 업계는 신상품과 신시장 그리고 투자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홍콩 HSCEI 연계 ELS의 손실논란을 비롯한 규제와 평판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홍콩 HSCEI 연계 ELS의 판매 잔액은 19.3조 원이다. 해당 ELS의 발행시점이 2021년(평균 가격 대 10,000pt 내외)에 집중되었으며, 기초자산인 HSCEI가 2022년 한때 5,000pt를 밀돌고 2024년 현재도 6,000pt에 머물러 있어 해당 ELS 상당수가 손실상환될 위험에 노출되었다. 더구나 은행에서 판매된 ELS가 전체의 82%인 15.9조 원에 달해 불완전판매 논란도 일부 제기되었다. 2024년 연초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HSCEI 연계 ELS의 판매에 대한 피해배상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실상환 우려와 평판위험, 규제 강화 등으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판매위축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ELS/DLS 발행규모가 2023년 같은 기간의 45%에 불과한 8.1조 원을 기록하였다. 구조화상품의 발행축소는 발행사의 관련 장내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주식과 이자율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축소되며, 평판 위험과 규제강화 등으로 향후 관련 비즈니스의 확장여부도 유의할 수밖에 없다.

**표 1** 홍콩 HSCEI연계 ELS 판매 현황

구분	현황		투자자 구분		상품수익구조	
	잔액(조 원)	계좌수(만좌)	개인(조 원)	법인(조 원)	낙인(조 원)	노낙인(조 원)
은행	15.9	24.8	14.8	1.1	7.8	8
증권	3.4	15.5	2.9	0.05	3	0.5
합계	19.3	40.3	17.7	1.15	10.8	8.5

자료: 금감원,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보도자료, 2024.1.8

**표 2** 홍콩 HSCEI연계 ELS 만기도래 현황

(조원)	24.1Q	24.2Q	24.3Q	24.4Q	25년~
은행	3.4	5.6	2.8	1.6	2.5
증권	0.5	0.7	0.3	0.5	1.4
합계	3.9	6.3	3.1	2.1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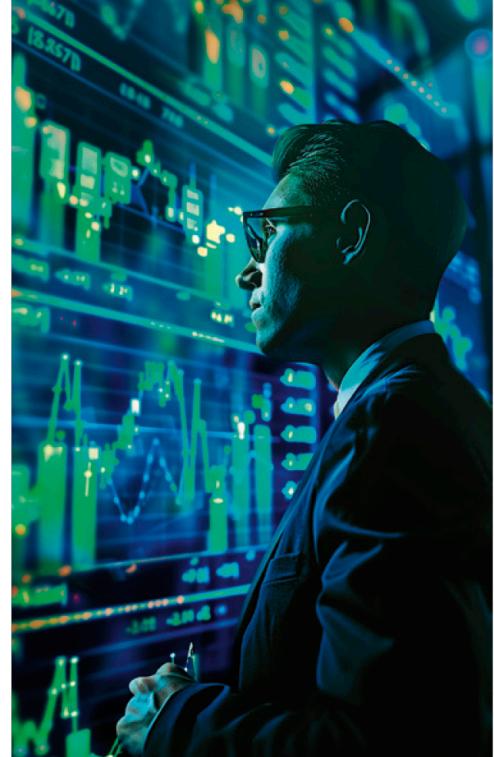
자료: 금감원,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보도자료, 2024.1.8

글로벌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Retail의 적극적인 매매가 활동인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에 해외 파생금융상품(장내상품)을 6.3조 달러를 거래하였다. 반면 증권사는 7,466 억 달러 거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미국 개별주식옵션 거래이다. 2023년 1월 총 1만계약에 그쳤던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개별주식옵션 거래량은 2023년 12월에 10.7만계약으로 연중 10배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미국 개별주식옵션에 대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는 2024년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4월의 거래량은 68만 계약으로 2023년 연간 거래량 42만 계약을 이미 상회하였다.

**그림 5**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 2024년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향방

2024년 글로벌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최대 화두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시기와 강도이다.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진행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흐름은 2024년에 유럽 ECB를 필두로 금리인하 기조로 반전하였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준의 행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이다.

끈적한 Sticky 인플레이션과 강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2023년 말에 대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회수와 폭이 2024년 2분기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시장은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2024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Multi-asset desk 입장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실행하고 변동성으로 인해 벌어진 시장의 틈에서 알파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2023년에 비해 2024년 글로벌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키포인트이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도 2024년 고금리의 부채상환 청구서가 점차 도래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관리와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율과 이자율 등 대외 매크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내외 파생금융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부록

## INFO

## 부록

## 부산 일반 현황

	기준	단위	통계	전국대비 비중(%)
--	----	----	----	------------

## GRDP 규모

부산	2023년 12월 지역내총생산	십억 원	104,297	4.8
부산·울산·경남		십억 원	310,612	14.3
전국		십억 원	2,165,717	100

## · 부산 일반 현황

## · 부산 지역 금융기관

## 점포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BIFC 인센티브  
제도· BIFC 입주기관  
현황

## 부산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2023년 12월 지역내총부가가치	%	0.3	0.9
광업·제조업		%	17.0	2.9
건설업		%	5.1	4.3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76.9(7.3)	5.8(5.1)
전기가스증기업		%	0.7	16.2

## 부산·울산·경남 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2023년 12월 지역내총부가가치	%	1.6	12.8
광업·제조업		%	38	19.1
건설업		%	4.7	11.7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55.2(4.9)	12.2(10.1)
전기가스증기업		%	0.5	32.6

## 컨테이너 처리량

부산	1월~12월 2023년	천TEU	23,154	76.8
전국		천TEU	30,147	100

## 거주환경(부산)

면적	2023년 8월	km <sup>2</sup>	771.3	0.8
인구	2024년 4월	명	3,343,903	6.5
기온	2023년 평균	°C	16	
강수량	2023년 평균	mm	2,191.4	

## 외국인관련(부산)

외국인 등록인구	2024년 4월	명	58,956
외국인 학교	2024년 6월	개	6
외국인 관광객	2023년	명	1,820,05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sup>1)</sup>

단위: 개

주 1) 출장소 포함

2)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신탁계정을 선택회사로 지칭

3) 자산운용사 펀드상품의 판매점포수

4) 조합수(본소 기준) 또는 금고수 기준

5)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체신취급국 및 지방우정청 제외

기 관 명	2022년 말	2023년 말	증감
<b>합 계</b>	<b>1,927</b>	<b>1,898</b>	<b>-29</b>
<b>예금은행</b>	<b>477</b>	<b>473</b>	<b>-4</b>
<b>일반은행</b>	<b>364</b>	<b>361</b>	<b>-3</b>
<b>시중은행</b>	<b>173</b>	<b>170</b>	<b>-3</b>
우리은행	42	42	0
SC제일은행	12	12	0
KB국민은행	51	49	-2
한국씨티은행	2	1	-1
신한은행	29	29	0
KEB하나은행	37	37	0
<b>지방은행</b>	<b>189</b>	<b>189</b>	<b>0</b>
대구은행	5	5	0
부산은행	174	175	1
제주은행	1	1	0
경남은행	9	8	-1
<b>외은지점</b>	<b>2</b>	<b>2</b>	<b>0</b>
야마구찌은행	1	1	0
중국공상은행	1	1	0
<b>특수은행</b>	<b>113</b>	<b>112</b>	<b>-1</b>
IBK기업은행	39	39	0
NH농협은행	59	58	-1
SH수협은행	12	12	0
한국산업은행	3	3	0
<b>비은행금융기관</b>	<b>1,450</b>	<b>1,425</b>	<b>-25</b>
수출입은행	1	1	0
신탁회사 <sup>2)</sup>	537	527	-10
자산운용회사 <sup>3)</sup>	558	544	-14
상호저축은행	27	27	0
신용협동조합 <sup>4)</sup>	47	47	0
상호금융 <sup>4)</sup>	24	24	0
새마을금고 <sup>4)</sup>	140	140	0
우체국 <sup>5)</sup>	116	115	-1

## BIFC 입주기관 현황

63층 메인빌딩			2024.7월기준
63	한국시티은행	2명	
	BMI 그룹	29명	
	UIB	29명	
	라이니원	29명	
50~51, 55, 56~62	한국거래소	496명	
55	IBK창공	20명	
53	캠코선박운용	15명	
	자금세탁방지위원회	10명	
52	신한은행	5명	
	부산국제금융금융연수원	2명	
	코스콤	2명	
	한국금융투자협회	7명	
	부산국제금융진흥원	17명	
	대한상사 중재원 & 아태해사 중재센터	29명	
3, 40~47	한국자산관리공사	610명	
5, 36~39, 54, 63	한국예탁결제원	395명	
4, 30~35	한국남부발전	489명	
7, 12~13, 23~27	한국주택금융공사	685명	
22	KDB산업은행	23명	
9, 21~22	부산테크노파크	32명	
21	한국무역보험공사	13명	
20	한국수출입은행	40명	
6, 10~11, 19	주택도시보증공사	449명	
14	신동보증기금	50명	
9	부산은행	6명	
	한국증권금융	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명	
8	비스페이스	80명	
2	HF 보금자리 어린이집		
	농협은행	10명	
	우리은행	12명	
	푸른바다 어린이집		
1	BIFC 어린이집		
<b>IFC부산</b>			
11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5명	
7~10	한국자산관리공사	145명	
<b>독립건물</b>			
	지상 15층, 지하 2층 기술보증기금	327명	
	지상 4층, 지하 1층 한국은행 부산본부	70명	
	지상 23층, 지하 3층 부산은행	942명	

## 부록

##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 I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

- 2007년 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년 04월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11월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울, 부산, 인천, 제주, 경기)
- 2009년 01월 : 해양·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 중심지 '서울' 지정

### I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면적 : 102,352m<sup>2</sup>
- 복합 사업개발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토지면적	24,856m <sup>2</sup>	12,276m <sup>2</sup>	10,292m <sup>2</sup>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생활시설
건축규모	197,169m <sup>2</sup> , 지하 4층, 지상 63층	183,132m <sup>2</sup> , 지하 7층, 지상 49층 · 36층(U자형 2개동)	147,000m <sup>2</sup> , 45층
사업기간	2008. 4 ~ 2014. 6	2015. 8 ~ 2018. 11	2020 ~ 2025(예정)
개발현황	2014. 12월, 입주완료	2018. 12월, 입주완료	-

- 개별 사업개발

구분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지하1층, 지상 4층	지하3층, 지상 23층
착공/준공	2009. 02 / 2011. 05	2011. 01 / 2013. 06	2011. 12 / 2014. 07

### I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도

#### 금융 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장)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부산광역시(금융블록체인담당관)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유치, 금융중심지 조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금융 관련 중·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

##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주요 일지

###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2009년 7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 플랜 용역 실시
- 2010년 8월, 부산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분야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0. 5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 2014년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복합개발사업(63층) 준공  
※ 준공식 : 2014. 8. 22
- 2014년 말,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이전공공기관(5), 지역기관(3), 해양금융기관(4), 개별기관(3)
- 2015년 4월, 2020년까지 총 4개\*부문 12개 과제 단계별 추진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 국제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금융 중심지 기본환경 조성)
- 2015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 2018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준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출범
- 2021년 5월, 국제금융네트워크 'FC4S' 정식회원 가입
- 2022년 3월,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착공

### ·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성과

#### <해양금융부문>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년 10월)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년 11월)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년 11월)
- 한국해양보증보험 보험업 인가(2015년 6월)
- 캠코선박운용 부산이전(2015년 6월)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년 4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 <파생금융부문>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년 2월)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년 3월)
- 금거래소 개소(2014년 3월)
-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년 1월)
- 청산결제본부 출범(2021년 5월)

### · 지역 내 금융관련 전문인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2014년 9월)

### · 국제 금융관련 교육연구기능 확충

-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소(2016년 9월)

### ·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외 이미지 제고

- 매년 2회 유럽·북미·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IR 실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 IOMA(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 : 2013. 5. 5. ~ 7. 파라다이스 호텔
- FIA(국제선물산업협회)컨퍼런스 : 2013. 6. 12. ~ 13. 파라다이스호텔
- ACSIC(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총회 : 2013. 11. 12. ~ 14. 조선호텔
-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 2015. 3. 26. ~ 29. 베스코
- FATF/APG(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 2016. 6. 18. ~ 24. 파라다이스호텔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 2018. 5. 21. ~ 25. 베스코
- KOAFEC(한-아프리카장관급경제협력회의) : 2023. 9. 12.~9. 15. 부산 아난티 힐튼

### ·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 중심지 내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세제지원 일몰 기한 연장\*

\*법인세 또는 소득세 : '25. 12. 31일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1제1항, 2항),  
취득세 : '26. 12. 31일까지로 연장(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 BIFC 인센티브 제도

### 외국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국외 ▷ 부산)		(시역외 ▷ 부산)	
법인세 <sup>1)</sup> 소득세 <sup>1)</sup>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취득세 <sup>2)</sup>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sup>3)</sup>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sup>3)</sup>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 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sup>3)</sup>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 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sup>3)</sup>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기관당 10억 원 이내)		

### 국내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 창업	지역본부/ 지점 신설	본사이전	지역본부/지점 이전
				(시역외 ▷ 부산)	
법인세 <sup>1)</sup> 소득세 <sup>1)</sup>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취득세 <sup>2)</sup>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sup>3)</sup>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sup>3)</sup>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 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sup>3)</sup>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 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sup>3)</sup>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기관당 10억 원 이내)		

※ 근거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

3)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 inside 부산금융 발간 목록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 New opportunities

## The global financial hub, **Busan**

**Busan designated as a Special Financial Opportunity Zone,  
heralding a new financial ecosystem**

Busan, as a Special Financial Opportunity Zone, offers substantial benefi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corporate tax exemptions and additional incentives.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exempt from corporate tax for up to five years. For large-scale investments, subsidies and additional incentives are also available. With renewed incentive program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aspires to harness the world's premier financial ecosystem, evolving into a **Global Financial Hub**.

Experience the future in Busan today



**Busan Finance Center**

Contact [info@kbfc.or.kr](mailto:info@kbfc.or.kr)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31-0296 FAX. 051-633-0398 [www.kbfc.or.kr](http://www.kbfc.or.kr)